

특집논문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의 국제비교[†]

김직수* · 이영희**

이 글은 2015년 6월 6일 전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결과를 국제비교 시각에서 분석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이해하고, 전 세계 시민의견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별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의견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중심으로 시민의견의 주요 차이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 시민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해 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세계시민회의 결과와 기후변화협상에 주는 시사점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대해 갖는 의미를 도출한다.

【주제어】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시민참여, 국제비교, 지구적 시티즌십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849).

* 중앙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전자메일: wildsidekim@gmail.com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자메일: leeyoung@catholic.ac.kr

1. 서론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같이 전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공적 분야에서의 의사결정은 일부 전문가와 정부관료 및 정치가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기후변화¹⁾ 문제처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고도로 복잡한 기술적 의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나아가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Held & Hervey, 2009; 이영희, 2011; Stevenson & Dryzek, 2014; Blue, 2015). 이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각종 여론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론조사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여론조사의 시행 주체가 아무리 조사결과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조사를 실시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과연 ‘시민들의 의견’으로서 ‘누구의’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전문적 식견을 지니거나 특정한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견해에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예컨대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사숙고하고’ 선택지를 고르도록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小林, 2010: 177-179).²⁾

1) “선진국들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야말로 인류가 지구상에 존속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안병욱, 2009: 31-32)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는 시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는 그 원인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누가’ 또 ‘어떻게’ 완화와 감축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적-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박순열, 2012: 6)이기도 하다.

2) 최근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은 42% 수준이며 2009년에 비해 관심도가 더 떨어졌다”는 글로브스캔(GlobeScan)의 조사결과에 대해 세계시민회의 사무국은 ‘숙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반박한 바 있는데, 이는 바로 기존의 단순

지난 2009년에 ‘지구온난화’, 그리고 2012년에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렸던 두 번의 세계시민회의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개최된 세계시민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숙의형 공론조사’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단순한 선호 취합에 머물지 않고,³⁾ 소극적인 ‘의견 반영’을 넘어 시민들의 ‘참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번 세계시민회의는 무엇보다 세계 77개국 97개 장소에서 1만여 명의 세계 시민들이 참여한 만큼, 전례 없는 규모의 시민참여형 기술영향평가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참가자들이 각기 다른 문화, 교육,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공통된 틀에 따라 토론을 벌였다는 점에서도 유례없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간 정부 이외에는 환경운동만이 지구적 수준에서 발언하는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적 공론장이 국가 주권 중심으로 형성됨으로써 지구적 시민사회와 지구적 시티즌십의 형성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올해 열린 세계시민회의는 지구적 수준에서 시민 공론 도출을 통해 지구적 시티즌십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다는 의의도 지닌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특집의 첫 번째 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난 6월 6일에 전 세계 77개 나라 9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에서 나온 세계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기후변화협상과 관련하여 세계 시민들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어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의견에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시민들의

설문조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거리에서 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면서 얻은 답변은 피상적이며, 그 신뢰성이 세계시민회의 결과에 비할 때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WWViews, 2015a).

3) 국내의 몇몇 사례 연구들(김명식, 2001: 139-141; 조현석, 2006: 9-10; 이영희, 2009: 219-221)도 ‘숙의적 시민참여’가 기존의 선호취합 모델과 구별된다는 점, 온전한 숙의적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숙의과정의 설계와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어 본 다음, 이러한 국제비교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하며 글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2. 세계시민회의 개최의 배경과 개요

1) 신기후체제 협상과 세계시민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예방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유엔총회에서 총괄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은 “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지구촌이 환경재앙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여, 1992년 환경 정상회담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목표 하에 합의된 것이다(차경은, 2012: 284-285).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주도하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가 만료될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를 마련하는 협상의 장이다. 이번 세계시민회의의 초점이 된 COP21이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안병옥, 2015)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11년 제17차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세계 각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감축체제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 즉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출범에 합의하였다. “협약 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뒤이어 COP17과 COP18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를 위한 협상 추진 일정에도 합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5월 말까지 협상 문안을 마련하여 2015년까지 협정을 채택하고, 2020년에 이르러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확대라는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선진국만이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개발도상국들

또한 적극적인 감축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한편, 한국은 2014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3위, 1인당 GDP는 세계 29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통계에서도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2012년 한국의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IEA, 2012)이며, 에너지 부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8톤으로 전세계 평균 4.5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또한 1850년에서 2011년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세계 12위에 이른다. 반면, 한국 정부는 1999년 이래 ‘기후변화종합대책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이신화, 2008: 50).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정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에 탄소배출권 부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거나, 2012년에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주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역량에 걸맞지 않게 기후체제 하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한국이 세계시민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흐름 속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COP21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정책 과정에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이처럼 2020년부터 새롭게 효력을 발휘할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부속서 I’ 국가들에게만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지웠던 교토 의정서(1997년에 체결되어 2019년까지 적용됨)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과 원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지난 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회의(COP20)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진(2015: 19-30)을 참고할 것.

2) 세계시민회의의 설계와 진행과정

세계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첫째로 ‘누가’ 시민의 목소리를 이끌어 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국 파트너들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 파트너는 주로 경험과 신뢰성을 지닌 대학 및 비정부기구들이 맡았다. 둘째로 무엇을 위해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COP21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의견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읽고 숙의와 토론을 거쳐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요컨대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일반시민들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세계시민회의의 설계와 진행과정은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두 차례의 세계시민회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먼저 저비용의 단순한 방법을 통해 참여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설계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법 등이 모색되었다.⁵⁾ 또한 COP21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정책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결과의 확산이 강조되면서 각국 파트너들에게 구체적인 미디어 전략 등 확산 계획 수립이 요청되었다. 전 지구적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수준에서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또한 강조되었는데, 이를 위해 준비과정에서 각국 파트너들에게 1개 장소 당 1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요청되었다. 한편, 이전에 비해 무엇보다 강조되었던 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결과의 도출이었는데, 이를 위해 이번 세계시민회의에서는 주관식으로 기술하는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세션이

5) 프랑스 환경부와 외무부, 파리 시정부, 독일 연방환경부 등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이러한 세계시민회의를 조직하기 힘든 나라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없어지고 모든 문항이 주어진 선택지에 대한 투표방식으로 통일되었다.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이전과 유사하였으나,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과정에서 회의 당일 조언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배석을 요청한 파트너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DBT 등은 전문가를 배제한 '일반시민'만 참가할 것을 강조하였다.⁶⁾

이번 세계시민회의를 통해 취합된 투표결과는 77개국 97개 장소의 9,378명의 자료이며, 한 국가 당 평균 참가자수는 122명이다. 각국 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직업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되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38.6세, 여성의 비율은 50%였는데, 한국에서는 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균연령은 46.9세, 성비는 여성비율이 55%를 차지하였다. 물론 DBT와 각국 파트너들이 세계시민회의를 조직하면서 목표로 한 국가 및 지역별 100명 내외의 참가자 표본 크기는 통계적 확실성에 있어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서 시민들의 의견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함에 있어 각국 또는 지역별 100여명 내외의 표본은 충분히 크고 또 다양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세계시민회의의 결과의 국제비교

1) 세션별 주요 결과: 공통 의견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는 이번 세계시민회의를 통해 모아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에 관한 시민의견의 특징들을 다섯 개 주제세션 별로 검토해 본다.⁷⁾

6) 이번 세계시민회의의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 특집의 첫 번째 논문을, 그리고 세계시민회의의 진행에 대한 참가 시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본 특집의 두 번째 논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란다.

7) 세션 및 투표문항 구성, 그리고 참가국 및 지역별 결과는 세계시민회의의 본부가 만든 공식 홈페이지 (<http://climateandenergy.wwviews.org>)에 공개되어 있고, 국내 결과는 한국의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만든 블로그(<http://blog.naver.com/wwview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0여 쪽 분량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세계시민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시민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행동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토론과 투표가 이루어졌다. 전 세계 참가자 시민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매우 관심 있다’(78.2%)고 응답하였으며, 반대로 ‘관심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1.9%에 머물렀다. 이러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기후변화예의 대응을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기보다는(26.8%)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었다(66.2%). 나아가 기존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결과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70.6%) 보고 있었다. 기후변화예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초점은 적응과 완화에 동일하게 맞추어져야 하되(62.8%), 세계 각국이 고강도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89.3%) 응답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누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후협약이나 조약을 통해 전 지구적 수준에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69.5%)는 의견과 더불어, 개별 시민과 시민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47.6%)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31.7%), 지방정부(7.3%), 기업과 민간부문(11.0%)을 꼽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다기 보다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문제라는 점,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두 번째 세션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수준(17.1%)이나 지역수준(21.9%)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59.0%)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대량으로 줄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저탄소 에너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56.3%), 저탄소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45.5%)을 꼽았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77.8%)을 꼽았다.

탄소 배출세나 배출거래제와 같은 탄소에 대한 가격 책정에 대한 지지는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21.3% 수준이었으나, 탄소세 지지 여부를 직접 물은 결과 87.9%의 시민들이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탄소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나라들은 점진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41.3%)과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세계 시민들의 의견(30.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화석연료 탐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탐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45.2%)이 가장 두드러졌다.

(3) 유엔 협상과 국가별 결의

세 번째 세션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별 노력이 강제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적응 및 완화 노력이 국가적 문제인지 아니면 전 지구적 책임의 차원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적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89.4%) 드러낸 가운데, 다른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이 속한 국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79.0%)고 응답하였다. 나아가 파리 협약을 통해 금세기 말에는 세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전 지구적 장기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95.8%)하였다. 특히 그러한 장기목표가 모든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녀야 한다는(67.5%) 견해가, 선진국과 신흥 경제발전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거나(17.5%), 모든 국가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10.8%) 견해에 비해 높은 지지를 얻었다.

(4)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네 번째 세션에서는 각 국가들의 공통되면서도 서로 다른 책임의 수준, 그리고 각국의 역량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좋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배출량(21.4%), 현재 또는 예상 배출량(39.1%),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역량(32.1%)을 꼽는 응답들이 나타나 전세계 참가자들의 시민의견이 다소간 분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저소득 나라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넘어, 2020년 이후에도 비용을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는 데 강한 동의(78.5%)를 드러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이 선진국들의 녹색기후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높은 지지(82.3%)와도 일맥상통한다. 기후기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들도 녹색기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75.0%)는 의견이 강하게 드러났다.

나아가 선진국들만이 기후기금을 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 가운데 77.3%가 부유한 개발도상국도 기후기금에 기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과 관련해서는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23.0%)과 더불어,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세 번째 그룹으로 구분되어 더 가난한 나라보다는 많은 책임을, 선진국보다는 적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55.3%)이 지지를 얻었다. 한편, 그 비중에 대해서는 의견이 차이가 나타났지만, 민간부문의 자금을 기후기금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85.9%)하였다.

그밖에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파리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기후변화 피해 구제를 위한 전 지구적 기금 책정(31.5%), 각국의 피해 구제 계획 시행 지원(34.4%), 국제기후법정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 마련(22.4%)과 같은 방안들이 지지를 얻어, 시민들이 민간보험과 같은 방식보다는 공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5)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세션은 기후행동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투명성 제고, 진행 사항의 보고, 그리고 계획과 행동의 준비 및 시행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파리 협약에서 각국이 기후 행동 약속을 5년마다 갱신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는 데 강한 동의(91.9%)를 드러내는 가운데, 유엔 산하기구의 기후행동 평가검토 권한에 관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연합된 노력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33.3%)도 적지 않았으나, 개별 국가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61.5%)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노력에 대한 보고서의 상호 점검 권한에 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17.2%), 공여국만이 수혜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28.3%)도 있었으나, 모든 국가들이 상호 점검 권한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지지(49.7%)를 얻었다. 끝으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파리 협약에 모든 국가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국가별 단기목표 설정이 포함되어야 하며(71.3%),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한다(89.8%)는 데에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였다.

(6) 요약과 합의

무엇보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전 지구적 차원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일국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는데, 이러한 시민의견은 참가 시민들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기후변화 문제에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비율이 2009년 세계시민회의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참가자들의 97%가 금세기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낮추는 목표에 동의하였고, 참가자들의

약 3분의 2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단기 목표설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2009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강조되었던 하향식 접근방법에서 각국의 자발적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⁸⁾로 관심을 돌려 온 경향(정서용, 2014: 197-201)을 고려할 때⁹⁾, 유엔기후변화협상의 각국 협상단 및 정책담당자들에 대해 지니는 의미가 크다. 더욱이 법적 구속력이라는 형식 이상으로 감축목표 상향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등이 중요하다는 점(정민정, 2014: 159)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관심과 적극성은 고무적이다.

그밖에도 탄소세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탄소세 부과를 늘려가는 방식을 선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별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최빈개발도상국(LDCs) 및 산유국(OPEC)과 여타 국가들 간의 응답 경향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주요 산유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군들이라는 점(신범식, 2011: 8-10), 그리고 석유 생산자인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석유 소비자들 또한 소비를 통해 환경 불평등의 생산과 유지에 가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윤순진, 2004: 87)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답 경향은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반면에 대규모 감축과 관련해서는 탄소가격 책정에 대해 21%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지지가 드러났

8)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파리 협약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채택될 경우, 기존 교토의정서의 구속력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정서용, 2014: 196-197).

9) 물론 '자발적 기여'를 둘러싸고도 유럽연합이나 소도서 국가연합 등은 자발적 기여의 이행에도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미국과 호주 등은 법적 구속력 없이 국내법을 통해 자발적 기여 이행을 확보하는 접근을 선호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조용성, 2008: 125-129).

고, 대규모 감축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와 보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탄소세에 대한 투표에서 아쉬운 점은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¹⁰⁾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토론되었음에도 투표 문항은 탄소세 도입에의 찬성과 반대 여부, 그리고 그 범위와 정도를 묻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국내적 감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대다수의 세계 시민들은 모든 개도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는 선진국 중심의 '부속서1'(Annex I) 및 개발도상국, 최빈국 중심의 '비-부속서1'(non-Annex I)과 같은 부속서 체제에 따른 국가그룹 규정보다는 개별 국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최근의 기후변화 협상의 경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끝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후기금에의 민간자금 도입을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IPCC의 보고서¹¹⁾에 따르면(IPCC, 2014) 민간자금 활용은 공적자금 및 정부 역할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후기금에의 민간자금 도입을 지지한 것을 공적자금을 통한 기금형성에 부정적인 의견¹²⁾으로 해석하기에는 여타 문항에의 응답 경향을 고려할 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민간부문에 기후변화 대응의

10) 그밖에도 국제적 무역구조 하에서 탄소세는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활용되어 개발도상국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각종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보다 특정 제품이 에너지 효율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최저효율기준'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Brack, 2000; 이찬송윤순진, 2010: 180에서 재인용).

11) 이 보고서는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로서, 2014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40차 IPCC 총회에서 최종 승인, 채택된 보고서이다.

12) 물론 기후변화 협약 과정에서 민간자금 활용을 둘러싸고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해 왔다. 민간자금 활용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장기재원 조성을 약속하면서 공적자금만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상당부분 민간 자원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민간자금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투자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박시원, 2014: 276-277).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관련 정책결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대응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개도국의 적응과 감축에의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 국가 간 시민의견의 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과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지만,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에 비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수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은 감축이나 적응이나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임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적극적인 대응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었다(〈표 3-1〉 참조). 이 점은 특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미디어와 정책 논의의 프레임이 '부담의 측면을 강조해 온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개발국에서는 대체로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따라서 당면한 빈곤 탈출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프레임이 지배적인데, 이번 세계시민회의에서는 저개발국 참가자들 역시 기존 프레임과는 대비되는 견해를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세계시민회의에 참가한 나라들 중에 기후변화로 인해 국토가 물에 잠기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현재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서 국가들이 꽤 들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1〉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민의견

구분	선진국	개도국
귀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매우 관심 있음	69.5%	80.0%
보통임	28.9%	17.2%
관심 없음	0.9%	2.2%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0.7%	0.7%
귀하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 현재의 방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위협임	27.2%	26.3%
대부분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임	63.9%	67.0%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5.4%	3.7%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3.5%	3.0%
귀하는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국은 파리에서 2°C 이상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결정해야 함	70.2%	61.9%
세계 각국은 고강도의 행동을 취해야 하지만 무엇이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님	23.0%	26.3%
세계는 현재 상태를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않는 목표를 선택해야 함	3.5%	8.2%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3.4%	3.5%

*사례 수: 선진국(Annex 1) 2,741명; 개발도상국(Non-Annex 1) 5,564명

(2) 화석연료 탐사 중단 필요성

화석연료 탐사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천연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보유국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의 경우 탐사 중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졌던 반면,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남아프리카, 영국(스코틀랜드), 독일, 나이지리아, 쿠웨이트 등 다수의 천연자원 보유국에서는 참가자들의 상대적 다수가 천연자원 탐사 중단에 동의하였다.¹³⁾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화석연

료 탐사 중단에 대한 지지가 강하였으나, 다른 문항들과 달리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부한 비율이 15%에 이르러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주요 천연자원 생산국가의 경우 참가자들의 20%가 응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여 화석연료 탐사가 민감한 이슈임을 보여주었다(〈표 3-2〉 참조).

〈표 3-2〉 귀하는 세계가 새로운 화석연료 탐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세계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탐사를 중단해야 함	45.2%	41.8%
석탄에 대한 탐사만을 중단해야 함	17.3%	15.0%
탐사를 계속해야 함	22.7%	23.6%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14.9%	19.7%

*사례 수: 전 세계 8,668명;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 1,394명

(3) 각국별 감축 조치 필요성과 기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각국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 참가자들이 전반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도서국가(SIDS)들에서 ‘다른 국가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국 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두드러졌다. 이는 소규모 도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보다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최빈개발도상국(LDCs)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조치를 취한다면 자국 역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시민의견이 전 세계나 소규모 도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국가가 배출 억제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

13)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은 석탄의 경우 많은 양이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무역 비중이 높지 않고 국제거래를 통한 이윤도 크지 않다는 점, 자원개발 중저 조건으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가난한 산유 개발도상국들도 적지 않다는 점(이찬송·윤순진, 2010: 179) 등이다.

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행동과 무관하게 국내적 감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표 3-3〉 참조), 이는 각국 협상단 및 정책담당자들이 자국의 상황이나 시민의견보다 다른 국가들의 동향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을 보여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표 3-3〉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세계	최빈 개도국	소도시 국가
예, 비록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함	79.0%	68.0%	85.5%
예, 하지만 다른 나라들 다수가 그럴 경우에만 그러함	17.0%	26.5%	9.3%
아니오,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개입할 필요 없음	1.8%	2.4%	1.2%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2.2%	3.0%	4.1%

*사례 수: 전 세계 8,628명; 최빈개발도상도국(LDCs) 2,263명; 소도시국가(SIDs) 855명

국가별 감축 목표설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이 개도국에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가 그간의 기후협상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이 점에서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이 역사적 배출량을 중시하면서도 현재의 배출량 및 경제수준을 감축목표 설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시민의견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¹⁵⁾, 전 세계 참가자들 대다수가 후자의 기준을 강조하고 있음은 명확하다(〈표 3-4〉 참조).

-
- 14) 최빈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ODA와 기후재정 지원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별되어 양자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박시원, 2014: 287).
 - 15)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중국은 자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이신화, 2008: 47-48).

〈표 3-4〉 귀하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좋은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선진국	개도국
현재까지의 배출량	17.2%	22.5%
현재 또는 예상 배출량	43.3%	38.0%
현재 또는 미래의 경제적 역량	29.0%	32.8%
국가별로 기여를 할 필요는 없음	2.7%	2.6%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7.8%	4.1%

*사례 수: 선진국(Annex 1) 2,696명; 개발도상국(Non-Annex 1) 5,462명

(4) 녹색기후기금의 확대

다수의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개도국의 적응과 감축에의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¹⁶⁾ 간에 시민의견의 균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고소득 국가의 시민 참가자들은 선진국의 추가적인 기후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거나(〈표 3-5〉 참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기금 의존 필요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특징(〈표 3-6〉 참조)을 보인다.

16) 고소득 국가는 1인당 GDP 12,746달러 이상인 국가, 저소득 국가는 1인당 GDP 1,045달러 이하인 국가를 말한다.

〈표 3-5〉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저소득 나라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하였는데, 2020년 이후에도 비용을 그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세계	고소득 국가
예	78.5%	69.4%
아니오	12.7%	14.8%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8.8%	15.7%

*사례 수: 전 세계 8,534명; 고소득 국가 2,777명

〈표 3-6〉 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처 노력이 선진국들의 기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예, 전적으로 그러함	10.4%	26.7%
예, 부분적으로 그러함	66.2%	60.4%
아니오	19.3%	11.1%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4.2%	1.8%

*사례 수: 고소득 국가 2,777명; 저소득 국가 2,226명

이러한 차이는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와도 연결된다. 지난 2012년 당사국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의 목표액과 조성 시기에 관한 내용이 합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문에 명시되지는 못하였고,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약속의 구체화를 요구해온 반면, 선진국들은 이를 꺼려 왔다.¹⁷⁾ 이를 고려할 때 선진국 시민들 역시 전세계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기후기금 확대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기후기금의 확대와 강화에 대한 전 세계 시민의견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17) 자금의 분배와 관련해서도 개발도상국들은 지속적으로 적응분야 지원 강화를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기후기금의 상당 부분이 적응지원에 쓰일 것이라는 방향성이 설정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조속한 장기재원 조성, 조기운영 등을 요청해 왔다(박시원, 2014: 285-288).

4.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 전세계와의 비교

이하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전 세계와의 비교 속에서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 여론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대응방법, 핵심주체에 관한 의견들을 살펴봄으로써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국내 시민의견의 맥락을 짚어본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과 접근법에 대한 의견, ‘부유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둘러싼 전 세계와 한국의 시민의견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끝으로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 참가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세계시민회의의 국내 개최의 의의를 도출한다.

1) 기존 국내 여론조사와의 비교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식과 핵심 주체에 대한 의견들을 기존의 국내 조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세계시민회의의 기법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기초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또 참가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른 시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따라서 참가자 개개인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다양한 프레임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감각과 결부시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 자신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선행지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계시민회의의 결과는 다수의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점차 학습하게 된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보자. 환경부의 201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시민들 가운데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0%에 이르렀는데, 2008년에 이루어진 동일 조사 결과의 90.9%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3년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1.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이는 세계시민회의에서 한국 시민 참가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대체로 '매우 관심 있다'(78.3%)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¹⁸⁾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반시민들은 저탄소 대체 에너지 개발 및 보급(35.9%), 범국민적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전개(22.7%)를 가장 많이 꼽았다(환경부, 2013). 이번 세계시민회의 결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방법으로 저탄소 기술 연구개발 지원(28.2%)과 저탄소 에너지 보조금 지원(30.1%)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사한 맥락의 문항에서 기후변화 관련 시민 교육(47.4%)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에서 기존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회의 결과에서는 저탄소 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라는 '보급'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높은 지지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범국민적 운동'이라는 막연한 캠페인이 아닌 시민교육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구체적 방안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밖에도 '전통적이고 지역 토착적 지식에 근거해 개발된 해결방안의 활용'(14.9%), 그밖에 '유엔 활동, 조약, 프로그램들'(18.8%)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2013년 조사에서 일반시민들은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42.2%),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39.8%), 기업(10.0%)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2014년 과학기술에 대한

18) 환경부 등의 기존 조사에서 적극적 응답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관심 정도'를 묻는 세계시민회의의 질문에 비해 '심각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기존 조사의 질문이 시민들에게 제3자적 입장의 '관찰자'로서의 위치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시민의식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물었는데, 전문가(29.8%), 정부(27.2%), 국제기구(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 세계시민회의에서는 '전 지구적 책임'을 꼽는 응답(40.4%)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국제적인 기후협약이나 조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책임(23.3%), 시민사회의 책임(18.5%), 기업과 민간부문의 책임(16.4%) 순이었는데, 전 세계 참가자들이 중앙정부의 책임보다 시민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였다. 다만, 세계시민회의가 전 지구적 규모의 행사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앞선 조사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업의 책임을 꼽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 전 세계와 비교해 본 한국 시민의견의 특징

먼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적응'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의 접근법이 전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 중 어느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전 세계 참가자들과 한국 참가자들 공히 완화(감축)에 비중을 두는 의견을 드러냈고, 특히 적응과 완화 모두 중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4-1〉참조). 반면, 대응의 초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와 한국 모두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는 가운데, 전 세계 참가자들은 국가보다 지역적 차원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 참가자들의 경우 지역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특징이 나타났다(〈표 4-2〉 참조).

한편, 한국 참가자들의 경우 지역보다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한 이유로는 첫째, 한국사회에서 권위주의적 국가의 규정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화 이후로도 분권화가 지체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마음 속에는 '중앙' 중심의 국가주의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¹⁹⁾ 둘째, 국제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인 부속서1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윤의영, 2004: 300-301; 강재남, 2007: 44-52). 한국은 기후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시급하지 않았다. 셋째, 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및 정책 형성이 국내에서는 최근어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2015년 4월 이클레이(ICLEI) 세계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클레이 의장으로 추대된 것도 이러한 국내적 관심을 반영한다(유정민·윤순진, 2015: 242).

〈표 4-1〉 앞으로 수 십 년간 전지구적인 노력이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세계		한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차적으로 적응에 초점을 맞춰야 함	1,032	11.9%	14	16.7%
일차적으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	1,899	21.9%	27	32.1%
적응과 완화에 똑같이 초점을 맞춰야 함	5,421	62.4%	42	50.0%
적응과 완화 둘 다 중요한 게 아님	144	1.7%	1	1.2%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191	2.2%	0	.0%
합계	8,687	100.0	84	100.0

19)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민주주의-신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관료의 정책독점, 권위주의 정당체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 민주화가 지체되었다(지주형, 2009: 192-196)는 지적을 참고할 수 있다.

〈표 4-2〉 귀하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구분	세계		한국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해결방안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5,123	59.1%	57	67.9%
해결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1,365	15.7%	21	25.0%
해결방안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함	1,964	22.7%	6	7.1%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216	2.5%	0	.0%
합계	8,668	100.0%	84	100.0%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세계 시민들이 모든 개도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표 4-3〉 참조). 이는 부속서1 및 부속서2와 같은 국가그룹 규정보다는 개별 국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최근의 기후변화 협상의 경향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지위 변동과 그에 따른 지원 혹은 책임 부과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유한’ 개발도상국²⁰⁾들에서도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과 유사한 시민의견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각국 정책담당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유한 개발도상국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다. 이는 한국이 세계시민회의의 참가국 가운데 부속서1에 속하거나 부속서2에 명시된 ‘선진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은행이 ‘고소득 경제’로 분류한 국가인 두 국가(칠레와 한국)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²¹⁾ 물론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개별 국가의 역량에 기초하여 기존 기후변화협약상의 국가 분류인 부속서 체제를 유지해

20) 세계시민회의는 ‘부유한 개발도상국’을 부속서1에 속하지 않지만, 소득수준이 중상위 혹은 상위에 속하는 국가들로 규정한다(WWViews, 2015b: 30-31). 참가국 중 부유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소득수준이 중상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16개 국가이며, 소득수준이 상위에 속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이다.

21) 한국 역시 부속서1로의 편입 압력을 꾸준히 받아 왔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다음 해인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한국도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후로도 종종 한국은 유사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부속서1과 2에 따른 구분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난 변화한 각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조용성, 2008: 111).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부유한’ 개발도상국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개발도상국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민의견은 2009년 지구온난화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6년 전 감축 목표가 협상 의제에 올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시민 참가자들은 감축목표 설정에 높은 지지를 보낸 바 있다.

〈표 4-3〉 귀하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와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부유한’ 개발도상국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세계	부유한 개발도상국	한국
모든 개발도상국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18.9%	18.2%	2.38%
더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함	23.0%	18.3%	23.8%
더 부유한 개발도상국은 세 번째 그룹으로 구분되어 더 가난한 나라보다는 많은 책임을, 선진국보다는 적은 책임을 져야 함	55.3%	60.1%	72.6%
잘 모르겠음/답변하기 싫음	2.8%	3.5%	1.2%

*사례 수: 전 세계 8,534명; 부유한 개발도상국 1,656명; 한국 84명

3) 세계시민회의의 한국 참가의 의의

지난 2014년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5.5%)이나 시민단체의 역할(9.3%)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는데, 이번 세계시민회의에서 마지막 세션 종료 후 이루어진 평가 설문 결과들 가운데 전반적인 만족도, 결과 활용에의 기대 정도, 유사 이슈에 대한

시민참여 적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표 4-4〉 참조)을 고려하면, 숙의와 참여를 경험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문항에서는 이번 세계시민회의의 주제인 ‘유엔 기후변화 협상’ 자체, 즉 국제적 기후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가 참가 이전과 이후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여(〈표 4-5〉 참조) 숙의적 시민참여의 교육적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4〉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평가
(각 4점 척도)

구분	세계			한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정보제공의 적절성	7,720	3.45	.579	82	3.28	.528
토론된 의견의 다양성	7,734	3.33	.656	84	3.52	.548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	7,630	3.41	.618	84	3.56	.523
결과 활용에의 기대 정도	7,172	3.18	.672	78	3.28	.579
유사 이슈에 적용 필요성	7,645	3.61	.530	84	3.52	.502

〈표 4-5〉 세계시민회의 참가 이전과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형성 과정 인지도 (각 4점 척도)

구분	세계			한국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기후협약 형성과정 인지도(사전)	8,549	2.50	.946	84	2.25	.943
기후협약 형성과정 인지도(사후)	8,554	3.22	.787	84	3.24	.801

5. 결론

우리는 세계시민회의의 결과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정책담당자들이 특수한 이해관계나 국가 간 차이보다 전 세계 시민들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 특히 책임의 부과를 둘러싼 차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차이들은 협상의 핵심 이슈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책임의 부과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어느 정도로 차등화되어야 하는가, 즉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한 의견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시민의견 차이는 이들 간의 생활수준 차이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일차적인 책임이 전 지구적 수준에 있다고 보는 가운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보다도 시민들 및 시민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 세계 시민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²²⁾에 대한 인식 속에서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시민들 스스로가 보다 식견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속의적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기후변화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강한 참여의사가 이를 증명한다. 나아가 시민들은 기후변화 이외의 다양한 정책의제에 대해서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한 열망은 2009년과 2012년의 세계시민회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전 지구적 수준에서, 기후변화라는 복잡한 주제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보여준 이상의 결과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지구적 시티즌십’ 형성의

22) 환경정의란 "인종, 소득, 문화 혹은 사회계급과 무관하게 환경위험과 건강위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호받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환경오염과 건강위험을 균형 있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박재묵, 2004: 298). 특히 기후변화는 그 영향에 대한 취약성과 복원력이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며, 특히 기후변화를 유발한 지역집단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집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의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단초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도 시민 참가자들 사이에서 세계시민회의라는 숙의형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다른 사안에의 적용 요구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일반시민들은 관련 문제 인지에 머물고 있고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는 정책 개입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낮은 단계의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보이고 있다(강윤재 외, 2015: 17-23).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시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를 전문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 참여 필요성 인식과 낮은 수준의 직접 참여 의향의 괴리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의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역할을 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놓여 있다. 달리 말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이것이 ‘낮은 단계의 시티즌십’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시민회의는 한국의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시티즌십 활성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끝으로 세계시민회의의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갖게 되는 아쉬움 두 가지를 지적하고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절차적인 아쉬움이다. 세계시민회의의 결과에 대한 국제비교가 잘 이루어지려면 각 나라별로 조직된 세계시민회의가 참가자 선발과 진행방식 등에서 균질적이어야 하는데, DBT 등 본부 측의 표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시민참여의 사회적 경험이 거의 없던 나라들에서는 참가자 선발과 진행에 있어 본부가 제시한 표준적 절차를 다소 이탈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시민회의에서 나온 세계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국제비교만이 아니라 그 의견들을 일반화하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시 세계시민회의가 추진된다면 각 나라들에서 표준화되고 균질화된 방식으로 회의가 조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용적인 아쉬움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미래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세대 간 갈등 요소를 지니고 있는 문제임에도(김명식, 2015: 191-192)

이번 세계시민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세대 문제에 관한 숙의와 토론, 그리고 합의 도출이 시도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세계시민회의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적절히 논의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올해 말 파리에서 개최될 기후변화협상 내용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강윤재·김지연·박진희·이영희·정인경 (2015),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와 전망: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제15권 제1호, pp. 3-43.
- 강재남 (2007),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식 (2001), 「생명복제, 합의회의, 심의민주주의」, 『과학기술학연구』, 제1권 제1호, pp. 123-153.
- 김명식 (2015), 「기후변화, 사회적 할인율, 숙의민주주의」, 『범한철학』, 제76집, pp. 215-236.
- 박순열 (2012), 「기후변화와 호주의 사회·정치적 균열」, 『공간과 사회』, 제22권 제3호, pp. 5-38.
- 박시원 (2014), 「기후변화 체제의 재정분야 쟁점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적응지원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3권, pp. 263-297.
- 박재묵 (2004),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창비.
- 신범식 (2011), 「탈위기 지구질서와 환경의 국제정치: 기후변화 대응체제의 현재와 미래」, 『EAI NSP Report 51』, 동아시아연구원.
- 안병옥 (2009), 「기후변화와 우리 삶의 존립방식」, 『환경법과 정책』, 제3집, pp. 5-38.
- _____ (2015), 「파리 기후변화 총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파리로 가는 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유정만·윤순진 (2015), 「런던과 뉴욕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3호, pp. 217-247.
- 윤순진 (2004), 「에너지와 환경정의: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

- 등을 중심으로」, 『ECO』, 제7호, pp. 78-114.
- 윤의영 (2004),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서울과 동경의 비교」, 『한국농촌학회지』, 제11권 제2호, pp. 291-301.
- 이신화 (2008), 「기후변화와 국제정치적 쟁점」, 『평화연구』, 제16권 제2호, pp. 30-66.
- 이영희 (2009), 「기술과 시민: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경제와 사회』, 제82호, pp. 216-239.
- _____ (2011),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 이유진 (2015), 「파리(COP 21)로 가는 길의 쟁점과 전망」, 『국가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이찬송·윤순진 (2010), 「기후변화의 국제정치경제: 기후변화레짐 내 환경-무역 갈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pp. 163-193.
- 정민정 (2014),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의 내용과 국제법적 성격」, 『국제법학회론집』, 제59권 제1호, pp. 141-163.
- 정서용 (2014), 「신기후체제 2015년 합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pp. 181-204.
- 조용성 (2008), 「기후변화 레짐과 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국제평화』, 제5권 제1호, pp. 101-132.
- 조현석 (2006),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 연구: 울산시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30.
- 지주형 (2009), 「한국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제4호, pp. 175-203.
- 차경은 (2012), 「법적 측면에서 본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pp. 275-306.

- 최정진 (2008),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23권 제1호, pp. 141-166.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2013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
- 환경부 (2013), 『2013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
- 小林 傳司 (2010), 「地球温暖化をめぐ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デザイン: WWViewsプロジェクト」, 『Communication-Design』, 3: 166-180.
- Blue, Gwendolyn (2015),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Opening up or Closing down Policy Options" Public Participation and Climate Governance Working Paper Series.
- Brack, Duncan, Grubb, Michael & Windram, Craig (2000), *International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ies*, London: Earthscan .
- Held, David & Hervey, Angus Fane (2009), "Democracy, Climate Change and Global Governance" Policy Network Paper.
- IEA (2012),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14*, Paris:International Energy Agency.
-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in R. K. Pachauri and L. A. Meyer (ed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Geneva: IPCC.
- Stevensen, Hayley & Dryzek, John S. (2014), *Democratizing Global Climate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WViews (2015a), "Why the GlobeScan Climate Poll is Wrong and How Public Support for a Strong Paris Agreement Has

Been Documented", *World Wide Views Newsletter 29*,
November 30, 2015.

_____ (2015b),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Result
Report",

http://climateandenergy.wwviews.org/wp-content/uploads/2015/09/WWviews-Result-Report_english_low.pdf

논문 투고일	2015년 10월 05일
논문 수정일	2015년 11월 10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15년 12월 11일

A Comparative Study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2015

Kim, Jik-Soo & Lee, Young Hee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of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which was organized internationally targeting global policy making in Paris at COP21. It also analyzes the views of Korean citizen participants on climate change from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is purpose, we try to outline the results of the consultations which offer 29 issues categorized into five sessions, such as importance of tackling climate change, tools to tackle climate change, UN negotiations and national commitments, fairness and distribution of efforts, making and keeping climate promises. As a result, we come to show som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ews of citizen participants in global and national context. Finally, we discuss some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regarding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and of global citizenship formation.

Key words: Climate change,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Global citizenship, COP21, World Wide Views